

북한의 은행

신원태 / 중앙일보 기자

문 제만 느껴졌던 북한가는 길이 요즘 들어 조금씩 가까워지고 남북 교류를 위한 접촉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과 연구자들의 북한 금융 부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 거래를 위해 자금 결제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또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 금융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은행을 비롯, 북한의 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감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고에서는 북한의 은행 기관 현황과 그 운영 실태, 그리고 주민들에게 투영된 은행의 모습을 살펴본다.

은행이 화폐 자금의 유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이란 점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특히 기관·기업소의 자금 수요를 보장하면서 그 경영 활동에 대해 재정적으로 통제하는 데 사회주의 금융 기관의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금의 조달과 운용

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은행과는 달리, 국가 경제의 계획·집행에 적극 개입하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은행 기능은 신용 및 자금 공급과 이를 매개하는 화폐 유통이라는 세 가지로 설명된다. 신용은 예금·대부 등 상환이 요구되는 자금 이동을 말하고, 자금 공급은 국가의 기본 건설 사업이나 기관·기업소의 유동 자금 및 경비 예산의 지급 등 일방적인 자금 제공을 말한다. 이들 신용과 자금 공급을 현금 및 무현금 유통 방식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지닌 유희 자금을 흡수하고 기관·기업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일반적인 은행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은 평양 중구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조선중앙은행 하나뿐이다. 중앙은행은 각 도마다 설치된 총지점과 시·군·구역 단위의 200여 개 지점을 통해 국내 금융

전반을 독점 수행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 은행제도의 가장 큰 특징인 단일은행제도(일원적 은행제도)이다.

발권 기능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금융·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과, 예금, 대출, 외환 등을 위주로 상업 금융을 담당하는 일반 은행으로 나뉘지는 자본주의권의 이원적 은행제도와 대별되는 부분이다.

국제 금융 및 외환 전문 기관인 무역 은행을 예로 들어보면, 북한 원화 자금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수출 업자의 수출 대금이 외화로 입금되면 수출 업자에게 외화만큼의 북한돈을 지불하기 위해 장부 상으로 국가에서 차입을 해야 한다. 다음에 수입을 위해 외화를 지불할 때 수입 업자의 중앙은행 원화 계정에서 이체를 통해 차입 자금을 갚는 형태를 취해 실제 북한돈의 수입이나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화 거래의 중앙은행 집중은 재정과 금융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은행의 재정 통제적 기능이 금융 기능보다 중시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현재의 일원적 은행제도가 정착되는 데는 20년이 걸렸다. 194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른바 신용 개혁을 통하여 중앙은행과 농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 기

관을 폐지했다. 1946년 4월 농민들의 영농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협동적 신용 기관으로 탄생한 농민은행은, 1958년 10월 농업의 협동화 완료를 계기로 국가 은행인 조선농업은행으로 변신하였다가 이듬해 7월 중앙은행에 흡수되었다. 1950년에 건설자금은 행이 설립되었으나 1964년 4월 중앙은행에 통합되었고, 이때 신설된 산업은행도 1976년 중앙은행에 흡수되었다. 이로써 마침내 단일 은행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렇다고 북한에 중앙은행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무역 결제를 포함한 대외 거래에서는 중앙은행의 지위를 가지는 조선무역은행이 1959년 11월에 설립되어 무역 거래·송금과 관련된 외화 결제 등 국제 업무를 총괄, 국내 금융을 전담하는 조선중앙은행과 양축을 이루고 있다. 또 70년대 후반 이후 여러 형태의 새로운 은행들이 잇따라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특징은 하나같이 무역 결제나 송금 등 대외 거래를 위한 창구로 역할이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들 은행이 대개 특정 기관에 소속된 경우가 많아 이들을 업무 성격에 따라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무역은행이 정무원 소속 국제 금융 기관

이라면, 1978년 11월에 설립된 대성은행은 당기관, 특히 김정일의 자금을 관리하는 이른바 39호실의 관련 무역 기관들을 위한 대외 자금 창구로 알려져 있다. 또 1993년 무역은행의 1 개 課가 분리되어 탄생한 금성은행은 인민무력부의 외화 관리 기관이다.

이밖에 1978년 9월 설립된 금강은행은 조선봉화무역총상사와 조선평양무역회사 등의 수출입 거래에 따른 대외 결제를 담당하는 외환 전문 은행이고, 1983년 2월 용악산은행으로 설립된 후 곡절 끝에 1986년 9월 재탄생한 창광신용은행은 북한의 방위 산업을 담당하는 당 기계공업부 산하의 외환·국제 금융 전문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1986년 9월 국제신용은행으로 출범했다가 1989년 8월 개명한 조선신용은행은 당 중공업부의 통제·지시를 받으며, 산하의 은별무역총회사 등 무역 회사들의 대외 결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4년 9월 합병법이 제정된 후에는 해외 교포 자본 유치를 위해 합병 은행들이 몇몇 탄생하였다. 1987년 5월 낙원무역상사와 일본의 팰리스社가 공동 출자, 조선낙원금융합영회사가 설립되었고, 1988년에는 재미 교포 자본과의 합작으로 고려금융합영회사 및 고려상업은행이 탄생하였다. 1989년 4월 조총

련과 합작으로 설립된 조선합영은행은 함흥, 사리원, 신의주, 원산, 평성, 청진, 해주 등지에 출장소를 두고 비교적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1991년 11월 홍콩 자본과 합작한 조선통일발전은행은 북한 최초의 외국 합작 은행으로 기록될 뻔 하였으나, 홍콩사측이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아 합병이 무산된 사례이다. 이 은행은 당 경공업부 산하 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3년에 조선합영은행을 흡수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1993년 11월 외국투자은행법이 제정되자 1995년 12월 네덜란드계의 ING동북아세아 은행과, 1996년 2월 페레그린·대성은행이 이 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와 별도로 나진·선봉지대에는 황금의 삼각주은행이 1995년 2월 발족했고, 90년대 들어 설립된 것으로 짐작되는 조선공업은행(Korea Industrial Bank)의 존재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특수 은행의 활동 범위는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고 거래 실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폐쇄성과 더불어 이들 은행의 한정된 역할에도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은행 거래라고 하면 일상적으로는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말하며, 주

민들에게 은행이란 말보다는 중앙은행이란 말이 더 자연스럽고 친숙하다. 조선중앙은행은 북한원화의 발행과 통화 조절을 비롯한 중앙은행 기능과, 예금·대부를 포함한 상업은행 업무, 국내 보험 업무와 본점의 국제 금융 업무, 귀금속의 수매·관리, 국가 자금의 공급, 기관·기업소의 고정 재산 등록·평가, 예산의 출납 등 국고 업무, 국가 자금 이용에 대한 재정적 통제 등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예금 및 보험 업무 정도다. 실제로는 중앙은행 지점이 아니라 읍 단위나 도시의 洞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저금소가 주민들과 접촉하는 기관이다. 협동농장신용부가 중앙은행의 대리 기관으로 농장 주민들의 저금을 취급하고 있고, 금성은행은 군인들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고 대리점 역할을 겸하고 있어 군인 저금을 수납한다.

일반 주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주 거래처인 저금소는 대출 기능이 없고 개인이 사업이나 생활 자금을 차입하려고 중앙은행 지점을 찾아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단지, 저금소에 돈을 맡겼다가 찾아 쓰는 것이 일반 주민에게 가능한 은행 거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생활 자금을 부쳐주는 친척이라도 있다면 합영은행 정도 드나들 일이 추가로 생기는 정도다.

주민들의 저금 실태를 보자. 생활비(월급)를 받을 때 3개월에 한 번씩 공제되는 인체보험은 일종의 강제 저축이라 할 수 있다. 한 번에 24 원 내지 30 원이 공제되며 3년 후 3%의 이자를 붙여 상환되는 저축성보험이다. 그밖에 사회보험이나 재해보험 등을 공제하고 받는 월급으로 양식과 주택 사용료 등 기본 생활비를 충당한다. 쌀 1 kg에 국정 가격이 8 전이고 주택 사용료가 고급 주택은 분기당 20~30 원, 농촌 주택은 방 한칸당 1 원 50 전 정도다. 국가배급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기본 생필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월급으로도 그런대로 생활이 되고 알뜰한 주민들은 저금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민저금에는 보통저금, 추첨제저금, 준비저금, 저금권저금 등이 있다. 보통저금은 입출이 자유로운 저금으로 연리 3% 정도의 이자가 붙는다. 추첨제저금은 입출이 자유로운 것은 보통저금과 같으나 이자대신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는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저금이다. 준비저금은 우리나라의 정기에 금이나 정기적금과 같은 것이고, 저금권저금

은 저금 통장대신 저금권을 내주었다가 만기에 그것을 제시하면 지불하는 저금이다.

70년대 북한 경제가 비교적 활기를 띠었을 당시까지는 자발적인 저금도 없지는 않았다고 한다. 돈의 가치가 안정되어 있었고 출금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1,000 원을 저금했다면 대단한 일로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것이 80년대까지 주민들이 저금소에 드나드는 대체적인 모습이었다.

물론, 고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일은 생각하기 힘들었다. 중국 등 외국에 친척이 있어 지원받는 집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의 돈을 가진 일부자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외국 친척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돈의 출처가 분명해 거리길 것이 없었으나, 불법적으로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은 그것을 은행에 예치했다가는 당장 안전부나 보위부의 수사가 들어오고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저금은 애초부터 비중이 크지 않았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서 저금은 재정 계획 상의 자금 동원 목적을 위한 강제 저축이 주축을 이룬다.

국가 단위에서 연간·분기별로 저금 수입 계획, 저금 지출 계획, 저금 잔고 계획 등 저금 계획이 수립되며 이에 따라 저금 사업이 벌어진다. 이같은 저금 사업은 70년대 말부터 강화되기 시작, 80년대에는 보편화되었으며 90년대 들어서는 극에 달했다.

90년대 접어들면서 저금소와 주민들 사이에 그런대로 평온했던 관계에 큰 파고가 일기 시작했다. 경제난과 비례해서 국가의 주민에 대한 상품 공급이 차질을 빚기 시작하면서 장마당 확대와 함께 돈의 가치가 요동을 치게 된 때문이다.

국가의 상품유통체계가 심각하게 차질을 빚자 장마당을 통한 사실 상의 시장 경제적 유통체계가 국가배급체계를 대체할 기세로 확산되었다. 암시장의 물가 폭등은 월급으로 받는 생활비의 효용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두 달 월급을 모아야 시장에서 쌀 1kg을 겨우 살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일반 주민들이 예금하러 은행에 갈 일이 없어졌다. 월급을 절약해서 저금한다는 것이 의미를 상실했다.

장마당 경제는 나날이 흥성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재치껏 돈을 모아 남모르게 일부자 대열에 낀 사람들은 돈을 은행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우선 출처 조사를 당해낼 수 없을 뿐

더러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은행이 이제는 과거의 은행이 아닌 것이다. 90년대 들어 두드러진 은행 거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저금한 돈을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없게 된 점이다. 한 귀순자는 “저금 통장에 들어간 돈은 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로 인해 생겨난 현상이 은행과 일반 주민들 사이의 돈뺏기와 숨기기의 되풀이되는 숨바꼭질이었다. 산업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 자금을 끌어내야 하는 은행은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주민들의 농작에 숨어 있는 돈을 끌어내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정년 퇴직자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자들의 연금에서 강제로 얼마씩 공제하는 강제 저축, 인민반 등을 통한 저축 경쟁, 해외 송금의 강제 저축, 화교 등 돈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일정 기간 후 반드시 인출해주기로 약속하고 거액의 예금을 부탁하는 은행 직원들의 섭외 활동 등을 통해 자금 흡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화폐 교환이다. 1992년의 화폐 개혁이나 1995년에 있었던 외화와 바꾼돈표 교환 조치의 내용은 간단했다. 기존 화폐와 똑같은 가치의 새돈을 만들어 기존 화폐를 못쓰게 만들어 주민들이 제발로 돈을 들고 은행에 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1인당 교환 한도액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강제로 예금시켰음은 물론이다. 화폐 교환은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재산상 손실을 강요했으며 특히 화교 등 갑부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응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러한 숨바꼭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은행 기관에 대한 감정이 크게 나빠졌고, 은행 기관은 무조건 멀리해야 할 기피 대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은행은 신용 사회의 첨병이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는 귀찮기만 한 천덕꾸러기로, 기관·기업소에게는 돈줄을 움켜쥐고 행세하는 상전처럼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했다. 은행 기능의 약화는 앞으로 북한의 총체적인 경제난을 해소해나가는 데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統**